

[별표 1]

산불경보의 발령기준(제23조제1항 관련)

산불경보구분	발령기준		
	산림청장	시·도지사	시장·군수·구청장
관심	○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	○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	○ 산불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경보 발령기준에 미달되는 경우
주의	○ 전국의 산림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(이하 “산불위험지수”라 한다)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○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○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 65 이하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경계	○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○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○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 85 이하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심각	○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	○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	○ 관할 지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

<비고>

1.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, 범 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한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대통령실장(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)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, 산불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산불유관기관·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.
2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, 심각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, 산불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.
3. 산불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 발생이 예상

되는 시기에 산림에 있는 가연 물질의 연소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
[별표 2]

산불경보별 조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
산불경보 구분	소속 공무원·직원의 산불 발생 취약지 배치 또는 비상대기 인원 기준	조치기준
관심	○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·대기	○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배치
주의		○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정 배치 ○ 공무원 담당 지역 지정
경계	○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6분의 1 이상을 배치·대기 ○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3분의 1 이상을 배치·대기	○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 발생 취약지에 감시인력 증원 ○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2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○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놓기 허가 중지
심각	○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·대기 ○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2분의 1 이상을 배치·대기	○ 민간·사회단체 및 산불유관기관의 산불 예방활동 참여 ○ 공무원의 담당 지역 주 4회 이상 순찰 또는 단속활동 ○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 ○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

<비고>

관심 및 주의 단계의 산불경보인 경우 산불방지대책본부에 속한 상황근무요원의 대기 인원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[별표 3]

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(제31조제2항 관련)

1. 보상 종류, 보상 대상 및 지급기준

보상종류	보 상 대 상	지 급 기 준
요양보상	○ 산불 예방·진화 작업, 인명 구조작업, 진화·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	○ 진료, 치료, 수술, 약제, 입원비를 지급한다. 다만, 치료비는 「공무원보수규정」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장애보상	○ 산불 예방·진화 작업, 인명 구조작업, 진화·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	○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 ○ 장애의 등급 및 등급별 장애보상금은 제3호의 장애등급별 보상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장애가 중복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지급한다.
장제보상	○ 산불 예방·진화 작업, 인명 구조작업, 진화·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	○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「공무원보수규정」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3개월분을 지급한다.
유족보상	○ 산불 예방·진화 작업, 인명 구조작업, 진화·교육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	○ 유족에게 「공무원보수규정」에 따른 8급 공무원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에서 지급한다.

2. 장애등급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에 따른다.

3. 장애등급별 보상기준

등 급	보 상 금	등 급	보 상 금
제1급	의사자보상금의 100/100	제6급	의사자보상금의 40/100
제2급	의사자보상금의 88/100	제7급	의사자보상금의 20/100
제3급	의사자보상금의 76/100	제8급	의사자보상금의 10/100
제4급	의사자보상금의 64/100	제9급	의사자보상금의 5/100
제5급	의사자보상금의 52/100		

※ 비고: 의사자보상금은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말한다.

[별표 4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6조 관련)

위반행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 금액
1.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·죽의 벌채, 임산물의 굴취·채취를 한 경우	법 제57조제1항	300만원
2.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	법 제57조제4항제1호	10만원
3.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	법 제57조제2항제1호	100만원
4.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57조제4항제2호	10만원
5.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(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57조제2항제2호	50만원
6.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(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)	법 제57조제2항제2호	30만원
7.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	법 제57조제3항제1호	30만원
8.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·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	법 제57조제3항제2호	20만원
9.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, 인화물질,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	법 제57조제3항제3호	30만원